

‘전두환 잔재 청산 활동’ 합천 시민단체, 오월영령 무릎 참배

5·18민주묘지서 무릎 꿇고 ‘일해공원 막지 못했다’ 사죄

‘전두환 기념비’ 짓밟아...윤석열 발언 규탄 기자회견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잔재물 청산 운동을 펼치는 경남 합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광주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참배했다.

전두환 적폐 청산 경남운동본부 준비위원회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추모탑 앞에서 분향·묵념을 마친 단체 회원들은 무릎을 꿇고 채 열사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전씨 고향인 경남 합천군 소재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이 지난 2007년 전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을 막지 못했다고며 열사 앞에 참배하는 뜻을 담아 ‘무릎

참배’를 했다.

김영준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대표는 “41년 전 5·18 민주항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왔다. (열사)님들의 가슴에 품고 실천하고자 했던 민주적 대동세상, 평화와 평등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들을 이어받지 못하고 부족했던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사는 합천에는 전두환의 호를 딴 공원이 버젓이 생겼다. 이를 막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부족함과 미흡함을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반성하고자 한다”고 참배 의의를 말했다.

단체는 민주신문 방명록에 ‘5·18 민주영령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전두환 학살자 잔재물 청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년 전 그 날을 늘 잊지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추종 세력의 부활을 반드시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단체 회원들은 묘지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동운 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 인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을 찾았다.

추모단에서 열사 추모 의례를 마친 이들은 묘지 입구 땅에 박혀 있는 ‘전두환 기념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잇따라 밟았다.

‘전두환 기념비’는 1982년 전두환

씨의 전남 담양군 방문을 기념해 세워졌던 비석으로, 광주·전남 민주동지회가 비석의 일부를 떼어내 가져와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설치했다.

이들은 오후엔 5·18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한다. 또 5·18민주광장에서 최근 전씨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두환 적폐 청산 경남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결성을 앞두고 있다.

‘생명의 숲 되찾기’ 운동본부는 전씨 고향인 경남 합천군의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이 지난 2007년 전씨의 아호(雅號·본명 외에 부르는 이름)를 따 ‘일해공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을 계기로 꾸려진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반대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남 합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탑 앞에서 분향을 마친 뒤 무릎 참배를 하고 있다.

공원 명칭 변경과 함께 해당 공원 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발언 규탄 기자회견도 25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윤석열 발언 규탄 기자회견은 25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윤석열 발언 규탄 기자회견은 25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여주시청 공노조 “청사내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실시해야”

“시청사 분산돼 이사비 등 100억여원 혈세·임대료 낭비”



여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5일 여주시의회에서 별관 증축 여론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공노조 제공)

여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청사내 별관 증축 여부를 묻는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여주시청공노조는 25일 여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반대하는 여주시의원

들의 시민 앞 사죄 및 사퇴촉구에 이어 여론조사실시를 요구했다.

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제21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청사 별관증축 합동여론 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통과됐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저 상임위원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통합청사 건립과 분산된 청사체제 종식을 위해 통탄의 심정으로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대 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대의 정치가 아닌 공천에 목을 매면서 일부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가 분산돼 이사비용 등 100억여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매년 흩어진 청사로 인해 매년 수억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공무원노조는 “본청사도 건립한지 40년이 된 노후화된 건물로 시민과 직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별관증축을 반대하는 정치인을 막고 화합으로 가기 위해 별관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청소년, 유튜브·댓글 통해 5·18 가짜뉴스 접속

5·18기념재단 전국 청소년 1105명 우편조사

유튜브가 청소년들의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련 정보 입수 경로로 주목받고 있지만 가짜뉴스도 무분별하게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18기념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2021년 청소년 5·18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중2~고2) 1105명 중 20.4%가 유튜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3.8%보다 6.6% 상승 수치다. 반면 TV를 통한 정보 인지는 27.6%로 지난해 31.6%보다 4% 줄었으며 교과서 23.5%에서 18.8%, 포털 사이트 6.0%에서 5.5%로 감소했다.

5·18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은 유튜브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TV 20.8%,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 20.0%, 포털사이트 15.8% 순이었다.

가짜뉴스를 접한 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64.9%가 ‘주적을 하지 않는다’에 응답했다. 댓글 등을 통한 가짜정보를 접한 뒤에도 추가 확인작업은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허위사실유포 처벌 등이 포함된 5·18특별법에 대한 인식은 38.4%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유나 기자

목포해경, 40대 ‘선박 방화범’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

8억원 상당 재산피해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현주선박방화)로 선원 A(43)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39분께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29t급 근해자망 B선박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화재로 인근에 계류돼 있던 어선을 포함해 3척의 선박에 불이 옮

겨붙어 8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선박에 대한 화재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내·외부의 CCTV와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방화 혐의점을 포착했다.

이어 통신수사와 탐문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를 지난 21일 목포시 북항 부두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B선박의 선원인 A씨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3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았다. 해경은 방화 등 추가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당시 목포항 내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에서 화재를 인지해 신속하게 진화를 실시하고, 주변 선박을 긴급 대피시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선박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